

2022년 국가직 9급 행정학 (2022.4.2.)

• 해설 : 이승철

1 직업공무원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 ② 능력발전의 기회 부여
- ③ 폐쇄형 충원방식
- ④ 신분의 보장

해설

① (×)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는 직위분류제의 특징. 직업공무원제나 계급제의 경우 생계급·연공급을 특징으로 함.

☒ 직업공무원제의 특징

- ① 일반행정가 중심
- ② 적극적 모집(젊고 유능한 인재의 채용) :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에 많은 흥미나 관심을 갖도록 이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능력·실적을 기준으로 좀 더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적절한 임용제도와 절차 마련.
- ③ 폐쇄형 임용과 생애직의 보장, 신분보장, 높은 승진한계, 연공서열의 중시
- ④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제고 : 특권의 향유나 치부(致富)수단이 아니라, 민주적 공직관에 입각하여 국가발전에 대한 공헌이나 공공봉사자로서의 높은 사회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
- ⑤ 적절한 보수지급 및 연금수준의 현실화로 생계보장 :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의 생계에 대한 불안감 제거.
- ⑥ 능력발전 : 승진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교육훈련 강화, 각 부처 간 및 중앙·지방 간 폭넓은 인사교류 등을 통한 능력발전 기회 부여.
- ⑦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인력수급계획 수립 : 인력계획을 통해 인사의 불공평이나 침체 방지, 모집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 보장, 효과적인 정원관리·승진계획 추진

답 ①

2 정책의 유형 중에서 정책목표에 의해 일반 국민에게 인적·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은?

- ① 추출정책
- ② 구성정책
- ③ 분배정책
- ④ 상징정책

해설

• 추출(抽出)정책 : 국민으로부터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정책 (예 토지수용, 징병, 과세, 세금). 항상 강제성을 지닌 것은 아님.

답 ①

3 직위분류제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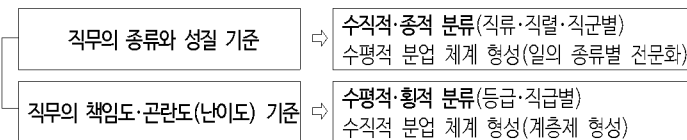
- ① '직위'는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의미한다.
- ② '직급'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곤란도·책임도가 서로 다른 군(群)을 의미한다.
- ③ '직렬'은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群)을 의미한다.
- ④ '직무등급'은 직무의 곤란도·책임도가 유사해 동일 보수를 줄 수 있는 직위의 군(群)을 의미한다.

해설

② (×) 직급(class) : (동일 직렬 내에서) 직무의 종류·책임도와 곤란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예 행정서기보, 행정서기, 행정주사보 등). 동일한 직급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수가 지급됨. 수평적인 등급과 수직적인 직렬이 교차하는 공통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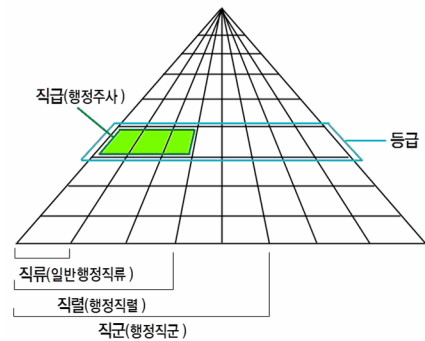
답 ②

☒ 직위분류제의 구조



기준	직무분석			직무평가	
	직류	직렬	직군	직급	등급
직무의 종류·성질	유사			유사	상이
직무의 책임도·곤란도	상이			유사	

• 직위분류제의 최소 단위에서 최대 단위까지 구성은 직위<직급<직렬<직군 순이다.



- ① 직위(position) :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직위분류의 최소단위(예 OO실장, OO국장, OO과장)
- ② 직류(sub-series) : 동일한 직렬 내에서의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예 일반행정직류, 법무행정직류, 재정직류 등)
- ③ 직렬(series of classes) :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책임도·곤란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예 행정직렬, 세무직렬)
- ④ 직군(occupational group) :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직위분류의 가장 큰 단위(예 행정직군·기술직군·관리운영직군)
- ⑤ 직급(class) : (동일 직렬 내에서) 직무의 종류·책임도와 곤란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예 행정서기보, 행정서기, 행정주사보 등). 동일한 직급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수가 지급됨. 수평적인 등급과 수직적인 직렬이 교차하는 공통부분.

## 2022년 국가직 9급 행정학

- ⑥ **등급(grade)** : (직렬과 직군을 초월하여) 직무의 종류·성질은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성·책임도 및 자격요건이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 군. 계급제의 계급에 해당.
- **직무등급** : 우리나라는 등급은 없고 실정법상 계급으로 표현했으나, 현재는 「국가공무원법」에도 '직무등급' 개념이 도입되어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 「공무원보수규정」도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가 유사하여 해당 직무 담당자에게 비슷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직위의 군'으로 규정한 바 있다. 고위공무원단과 외무공무원은 직무등급이 적용되며, 더 높은 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되는 것을 '승격'이라 한다.

[관련기출] **직위분류제 기본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5 서울9급

- ① 직급-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 곤란성·책임도 및 자격수준이 상당히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직위를 포함하는 것
- ② 직류-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유사한 직무의 군
- ③ 직렬- 난이도와 책임도는 서로 다르지만 직무의 종류가 유사한 직급의 군
- ④ 직군- 직무의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범주

답 ①

[관련기출]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인 직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 군무원

- ①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군
- ②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 ③ 동일한 직렬 내에서의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
- ④ 직무의 종류·성질은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

답 ①

### 4 월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정부규제로 발생하게 될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부담된다. 그러나 편익은 크고 동질적인 소수에 귀속된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소수집단은 정치조직화하여 편익이 자신들에게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다.

- ① 대중정치                      ② 고객정치                      ③ 기업가정치                      ④ 이익집단정치

**해설**

☒ 월슨(J. Wilson)의 규제정치모형	감지된 규제의 편익(수혜자집단)	
	낮은 수준으로 넓게 분산(불특정 다수)	높은 수준으로 좁게 집중(특정 소수)
감지된 규제의 비용 (비용부담집단)	낮은 수준으로 넓게 분산(불특정 다수)	대중정치(다수의 정치)
	높은 수준으로 좁게 집중(특정 소수)	고객의 정치
		기업가적 정치(운동가의 정치)
		이익집단정치

☒ **고객의 정치(client politics)**

<b>의의</b>	규제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부담되지만 규제의 편익이 크고 동질적인 소수에게 귀속되는 정치적 상황에서 수혜자집단의 집단행동은 강화되고, 비용부담집단의 집단행동은 완화되는 유형.
<b>사례</b>	<b>주로 경제적 규제에서 발생. 진입규제(의사·변호사 등 직업면허, 인·허가제도), 농산물 최저가격규제, 수입규제</b>
<b>특징</b>	① 소수 수혜자 집단은 잘 조직화되어 규제기관의 정책형성·집행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편익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정치적 압력 행사. 정부관료(규제기관)가 이익을 받게 되는 소수집단(피규제기관)의 이익을 대변(Agent)하는 <b>지대추구(Rent Seeking)</b> 나 <b>포획(capture)</b> 이 강하게 나타나고, 양자 간 공생관계를 보이며, 전체국민의 공익은 저해될 수 있음. 정부규제 도입 과정에서 조용한 막후교섭과 로비가 나타나며 소비자단체 등 공익집단의 항의나 반박이 없는 한 별다른 논란의 여지 없이 <b>은밀하게 이뤄짐</b> ② 규제비용이 전체에게 분산되어 <b>비용부담집단에서는 집단행동의 딜레마</b> (무임승차 등 소극적 행위가 발생). ③ <b>해당 산업에서 경쟁이 제거 또는 약화됨</b> (신규사업자의 진입은 제한되거나 많은 비용이 필요) → 기존에 이미 그 산업이나 직종의 종사자들은 높은 수익성을 보장받게 됨.

답 ②

[관련기출] 다음 중 월슨(J. Wilson)의 규제정치모형에서 말하는 고객정치(client politics), 즉 정부가 공익보다는 피규제집단의 이익을 수호 하는 포획(capture)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2017 소방간부

- ① 편익과 비용이 각각 소수의 특정 집단들에 집중된 경우
- ② 편익과 비용이 각각 다수 국민들에게 넓게 분산된 경우
- ③ 편익은 다수 국민에게 분산되고 비용은 소수의 집단에게 집중된 경우
- ④ 편익은 소수의 집단에게 집중되고 비용은 다수 국민에게 분산된 경우
- ⑤ 편익과 비용의 규모가 거의 비슷한 경우

답 ④

[관련기출] 월슨(J. Wilson)의 규제정치모형 중 불특정 다수가 비용을 부담하고 소수에게 편익이 집중되어 로비와 규제포획 등이 일어나는 경우에 해당 하는 것은?

2014 행정간부

- ① 이익집단 정치    ② 고객 정치    ③ 기업가적 정치    ④ 대중정치

답 ②

5 동기유발의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이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                         |
|----------------------------|-------------------------|
| ㄱ. 브룸(Vroom)의 기대이론         | ㄴ. 애덤스(Adams)의 공정성이론    |
| ㄷ.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       | ㄹ. 엘더퍼(Alderfer)의 ERG이론 |
| ㅁ. 맥그리거(McGregor)의 X이론·Y이론 |                         |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ㅁ      ④ ㄷ, ㄹ, ㅁ

해설

ㄱ, ㄴ, ㄷ은 과정이론, ㄹ, ㅁ은 내용(욕구)이론

☒ 동기부여이론의 유형 - 내용이론(욕구이론)과 과정이론

내용이론(content theory), 욕구이론(need theory)	과정이론(process theory)
<b>행위를 야기하는 원인(욕구) 확인에 초점</b> - 무엇(what)이 행동을 유발하는가? ⇨ 욕구(욕구의 내용) 행동과 원인(욕구) 간의 인과관계의 분석. 사람 마음속의 무슨 요인(욕구)이 행동을 유발·유지시키는가? 인간의 행동을 작동시키고 에너지를 일정한 방향으로 조정하며 유지시키는 내적 요인에 초점. 인간의 욕구와 욕구에서 비롯되는 충동, 욕구의 배열, 유인 또는 달성하려는 목표 등을 설명.	<b>어떤 과정을 거쳐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는가?</b> - 어떻게(how) 행동이 유발되는가? ⇨ 동기유발 과정 행동과 다양한 원인 간 인과관계의 매개경로 분석 동기유발 변수와 동기유발 과정 상호간 관계를 밝힘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욕구충족을 위해 여러 가지 행동 대안 중 어떠한 방법으로 행동선택을 하는가에 초점.
<b>1. 전통적 동기이론</b> ① 합리적 경제적 인간모형 : 과학적 관리론, X이론과 관련 ② 사회적 인간 모형 : 인간관계론, Y이론과 관련 <b>2. 자아실현적 인간 모형(성장이론, 현대적 모형)</b> ① Maslow의 욕구계층론      ② Alderfer의 ERG이론 ③ Murray의 명시적 욕구이론      ④ McGregor의 X·Y이론 ⑤ 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      ⑥ Argyris의 성숙·미성숙이론 ⑦ Likert의 관리체제론      ⑧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b>3. 복잡한 모형</b> ① Schein, ② Hackman과 Oldham의 직무특성이론 <sup>주1)</sup>	<b>1. 기대이론</b> ① Vroom의 선호·기대이론(VIE이론) ② Porter·Lawler의 성과·만족이론 ③ Georgopoulos의 통로·목적이론 ④ Atkinson의 기대모형 <b>2. Adams의 형평성(공정성) 이론</b> <b>3. 학습(강화·순차)이론</b> <b>4. Locke의 목표설정이론</b> <b>5. Kelly의 귀인이론</b>

☒ 주1) 직무특성이론을 과정이론으로 보는 견해(이중수 외 새행정학 2.0)도 있음.

답 ①

[관련기출] 동기부여에 대한 과정이론만 모두 고른 것은?

2014 지방9급

- |                             |                     |
|-----------------------------|---------------------|
| ㉠ 애덤스(Adams)의 형평성이론         | ㉡ 브룸(Vroom)의 기대이론   |
| ㉢ 매클레랜드(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 ㉣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 |
- ① ㉠, ㉡      ② ㉠, ㉢, ㉣      ③ ㉡, ㉢, ㉣      ④ ㉢, ㉣

답 ②

[관련기출] 동기부여이론 중 내용이론을 모두 고른 것은?

2011 국회9급

- |                     |                  |                          |                |
|---------------------|------------------|--------------------------|----------------|
| ㉠ Vroom의 기대이론       | ㉡ Maslow의 욕구계층이론 | ㉢ Porter와 Lawler의 업적만족이론 | ㉣ Adams의 형평성이론 |
| ㉤ Argyris의 성숙-미성숙이론 | ㉥ Skinner의 강화이론  | ㉦ Ouchi의 Z이론             |                |
- ① ㉠,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답 ④

6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 보통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법인격을 갖는다.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상 겸임 제한 규정에 의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없다.

해설

개정되어 신설된 지방자치법 규정 내용이 출제됨. 이하 지방자치법 규정.

- (○) 제199조(설치)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구성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199조(설치) ③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 제204조(의회의 조직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 (×) 제205조(집행기관의 조직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한다.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9조(겸임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

답 ④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1993)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b>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b> 설치 가능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상호협의를 따른 <b>규약을 정해 각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b> 받아야 함. * 설치시 국가나 시·도 사무의 위임이 필요하면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무 위임 요청 가능 ③ 특별지방자치단체는 <b>법인으로 함.</b>
설치 권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해산·규약변경 권고 가능. * 권고가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
구역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합한 것으로 함. 단, 그 사무가 구성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에만 관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를 구역으로 할 수 있음.
규약	규약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목적·명칭·구성자치단체·관할구역·사무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규약 변경시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필요
기본계획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사무 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②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사무를 처리.
의회의 조직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b>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검직 가능).</b> ②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의결할 안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지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그 의결 결과도 통지).
집행 기관의 조직 등	① <b>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b> : 규약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 <b>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직 가능</b> ② <b>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직원</b> : 규약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
경비의 부담	① 운영 및 사무처리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사무처리의 수혜범위 등을 고려해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야 함. ② 국가 또는 시·도가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 가능.
사무처리상 항통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리 사항 등을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시·군·자치구만으로 구성시·도지사 포함)에게 통지해야 함.
가입 탈퇴	① 가입·탈퇴시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가입·탈퇴 신청 ② 신청을 받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입·탈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
해산	①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등 해산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해야 함. ② 해산시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의로 재산을 처분하고 사무·직원을 재배치해야 하며, 국가나 시·도 사무를 위임받았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협의 불성립시 당사자의 신청으로 행안부장관이 조정 가능)
규정 준용	시·도, 시·도외 시·군 및 자치구 또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시·군 및 자치구로 구성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에 관한 규정을, 시·군 및 자치구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군 및 자치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

7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에 따른 정책집행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전적 기술자형'은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정책집행자는 그 목표를 지지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 ② '재량적 실험형'은 정책결정자가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를 위해 목표와 수단을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 ③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을 강구한 다음 정책결정자를 설득하고, 정책결정자는 정책집행자가 수립한 목표와 수단을 기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 ④ '지시적 위임형'은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와 수단을 설정하면,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의 지시와 위임을 받아 정책대상집단과 협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해설

- ① (○) 고전적 기술자형: 결정자가 목표 설정, 집행자는 기술적 수단을 강구
- ② (○) 재량적 실험형: 결정자는 추상적 목표만 설정, 집행자는 구체적 목표와 수단 결정 권한 지님(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 받음)
- ③ (○) 관료적 기업가형: 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을 정하고 결정자를 설득 또는 강제
- ④ (×) 지시적 위임형: 결정자가 목표 설정, 집행자는 기술적·행정적 수단 강구. 집행자 상호 간에 행정적 수단에 관하여 협상. 결정자는 정책의 목표를 자세하게 기술하여 집행자들에게 목표달성을 지시하고, 집행자는 그 목표를 받아들이고, 다만 수단의 선택시에는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지니게 됨.

☒ 나카무라(R. Nakamura)와 스몰우드(F. Smallwood)의 정책집행 유형론

고전적 기술 관료형 (classical technocr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를 엄격히 구분, 결정자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집행자들은 이 목표를 지지.</li> <li>결정자는 계층제적(위계적) 명령구조를 형성하고, 특정 집행자에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b>기술적 권한만 위임</b>.</li> <li>집행자는 구체적이고 세세한 <b>기술적 문제 정도에서만 미약한 재량권</b>을 부여받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함.</li> <li>결정자가 결정한 정책내용을 집행자가 충실히 집행. 결정자가 정책집행자들의 활동을 엄격히 통제함.</li> <li>집행자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능력을 지님.</li> </ul>
지시적 위임자형 (instructed delegat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결정자들에 의해 목표가 수립되고 대체적인 방침만 정해진 뒤 나머지 부분은 집행자들에게 위임됨.</li> <li>결정자가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집행자는 목표의 소망성에 동의함.</li> <li>정책결정자는 정책의 목표를 자세하게 기술하여 집행자들에게 목표달성을 지시하고, 정책집행자는 그러한 목표를 받아들이고, 다만 <b>수단의 선택시에는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b>을 지니게 됨.</li> <li>집행자는 목표달성에 필요한 <b>기술적·행정적[관리적]·협상적[교섭적]</b> 능력을 소유.</li> </ul>
협상자형 (bargain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결정자와 집행자간 반드시 정책목표나 수단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님.</li> <li>공식적 <b>정책결정자가 목표를 제시</b>하지만 집행자와 목표의 소망성에 대해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님.</li> <li>결정자와 집행자 간, 집행자 상호 간 <b>목표와 수단에 관해 협상</b>하며, 힘과 협상력이 우월한 집단의 의도가 많이 반영된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됨. 집행자들이 결정자들의 권위에 쉽게 압도당하지 않을 때 나타남.</li> </ul>
재량적 실험가형 (discretionary experiment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결정자가 정책수립 능력이 없고, <b>집행자에게 광범한 재량을 위임</b>하려는 유형.</li> <li>정책결정자는 사회문제의 복잡성과 정보·기술의 한계로 인해 불확실한 상황에서 구체적 정책이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추상적 수준에 그침 (<b>결정자는 추상적인 일반 목표는 지지하지만,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할 능력이 없음</b>).</li> <li><b>결정자는 집행자에게 목표를 구체화</b>하고, 집행수단을 개발하도록 <b>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b>하고 집행자들은 정책목표의 구체화, 수단 선택, 정책 시행을 자기 책임 하에 관장.</li> <li>집행자는 과업의 수행의사와 수행능력이 있음.</li> </ul>
관료적 기업가형 (bureaucratic entrepreneu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집행자가 정책결정자의 권한을 장악</b>하고 <b>정책과정을 완전히 통제</b></li> <li>집행자는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권력을 동원하여 결정자가 받아들이도록 설득이나 강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li> <li>집행자는 결정자와 협상·홍정하여 목표달성에 필요한 수단을 얻어낼 수 있음.</li> <li>집행자는 그들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하며 달성할 능력도 보유.</li> </ul>

구 분		고전적 기술자형	지시적 위임자형	협상자형	재량적 실험가형	관료적 기업가형
정책목표	추상적 목표	결정자	결정자	협상 결과에 따라 역할 분담	결정자	집행자
	구체적 목표	결정자	결정자		집행자	집행자
정책수단	행정적 수단	결정자	집행자		집행자	집행자
	기술적 수단	집행자	집행자		집행자	집행자
정책집행자의 재량		재량권 적음 ← → 재량권 많음				
정책평가기준		효과성	효과성, 능률성	지시자의 만족도	수혜자에 대한 대응성	체제유지도

답 ④

[관련기출] R. Nakamura와 F. Smallwood가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책집행을 유형화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 경찰간부

- 고전적 기술관료형 :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를 엄격히 구분하여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가 결정한 정책내용을 충실히 집행하는 유형을 말한다.
- 지시적 위임가형 :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목표가 수립되고 대체적인 방침만 정해진 뒤 나머지 부분은 집행자들에게 위임되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정적, 기술적, 협상적 권한은 여전히 정책결정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 재량적 실험가형 : 정책결정자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해 막연하고 추상적인 정책목표를 결정하고 정책집행자에게 정책목표와 수단선택을 위임한다.
- 관료적 기업가형 : 정책집행 담당 관료들이 큰 권한을 보유하고 정책과정 전체를 좌지우지하며, 결정권까지 행사한다.

답 ②

8 목표관리제(MBO)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부하와 상사의 참여를 통해 목표를 설정한다.
- 중·장기목표를 단기목표보다 강조한다.
- 조직 내·외의 상황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조직에서 성공확률이 높다.
- 개별 구성원의 직무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목표의 정성적, 주관적 성격이 강조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해설

- (○) MBO는 기존의 일방적·지시적 관리방식을 탈피하여, 조직의 상하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조직단위와 개별 구성원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에 따라 생산활동을 수행한 후 성과를 측정·평가·환류하여 관리의 효율화와 조직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관리기법이다.
- (×) 장기적·추상적·무형적·질적·비가시적 목표보다는 단기적·구체적·유형적·양적·가시(可視的) 목표(Objectives)를 강조한다.
- (○) 불확실하고 유동적·가변적인 업무환경에서는 목표가 빈번히 수정되어 명확한 목표설정이 되지 못하므로 MBO 적용이 곤란하다. 따라서 조직 내·외의 상황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조직에서 성공확률이 높다.
- (×) 목표의 명확성과 계량적 측정가능성이 요구되므로 정성적(定性的)·주관적 성격의 목표보다는 정량적(定量的)·객관적 성격이 강조된다.

MBO의 특징인 것	MBO의 특징이 아닌 것
유형적·양적·단기적·결과지향적·가시적인 목표 중시. 목표전환 우려. 산출(output) 중시	추상적·질적·가치적·장기적·비가시적 목표 중시. 목표전환 방지. 결과(outcome) 중시
안정된 상황에 적합	환경의 불확실성·유동성 상황에 적합. 상황변화에 대한 신속적 대응
분권화·참여·자율적·민주적 관리. Y이론. 통합모형. 자아실현인관. 후기인간관계론	집권적·권위적·통제적 관리. X이론. 교환모형. 경제인관·사회인관. 과학적관리론
결과(result)·목표 중시, 목표달성에 초점, 환류 중시	과정(process)·수단 중시, 행태변화에 초점, 환류 경시
조직의 효과성에 대한 목표모형, 개방체제관	조직의 효과성에 대한 체제자원모형, 폐쇄체제관
추진방향 - 상향적	추진방향 - 하향적
내부 계선관료 중심, 일반관리기법 활용	외부 전문가 중심, 행태과학적 지식(전문지식) 활용
대내적 민주성	대외적 민주성, 고객중심행정
궁극적 목적은 조직의 효과성·능률성(효율성·생산성)	궁극적 목적은 민주성
갈등의 건설적 해결. 협력을 통한 조직 전체의 효율성	갈등·대립 유발. 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

답 ②

9 동일 회계연도 예산의 성립을 기준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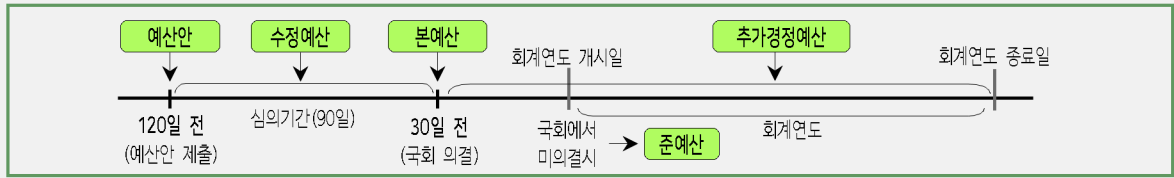
- ① 본예산, 수정예산, 준예산
- ② 준예산, 추가경정예산, 본예산
- ③ 수정예산,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 ④ 잠정예산, 본예산, 준예산

해설

• 성립 가능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수정예산 ⇨ 본예산 ⇨ 추가경정예산 ⇨ 준예산 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본예산 의결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뤄진 후 국가재정법 상 추경예산 편성 사유가 발생하면 회계연도 개시 전이라도 편성이 가능하므로 준예산보다 먼저 성립될 수 있다.

☑ 예산절차(성립시기) 상 분류 -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 (예산안 변경)	예산안 제출 후 국회의 의결 전, 국회의 예산심의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안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여 제출하는 예산(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필요) - 예산 성립 전 예산안 변경
본예산(당초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정기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의결·확정된 예산. 새로운 회계연도를 위해 최초로 성립한 예산.
추가경정예산 (예산 변경)	예산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하여 성립한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예산안의 국회 통과 전에 수정하는 수정예산과 다름).



답 ③

10 (가) ~ (라)의 행정이론이 등장한 시기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㉑ 정부와 공공부문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네트워크를 중시하고, 정부는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조정자의 입장에 있다고 하였다.
- ㉒ 미국 행정학의 '지적 위기'를 지적하면서 인간을 이기적·합리적 존재로 전제하고, 공공재의 공급이 서비스 기관 간 경쟁과 고객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 ㉓ 정치는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며,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관리활동으로서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분명히 하였다.
- ㉔ 왈도(Waldo)를 중심으로 가치와 형평성을 중시하면서 사회의 문제해결에 대한 현실 적합성을 갖는 새로운 행정학의 정립을 시도하였다.

- ① ㉒ → ㉑ → ㉓ → ㉔
- ② ㉒ → ㉑ → ㉔ → ㉓
- ③ ㉑ → ㉒ → ㉓ → ㉔
- ④ ㉑ → ㉒ → ㉔ → ㉓

해설

- ㉑ 19C말 행정관리론. 굿노(F. Goodnow)는 「정치와 행정 (Politics and Administration. 1900년)」에서 정치는 국가의사의 결정작용(국가의지의 표명과 정책 구현)이고, 행정은 국가의사의 집행(실행·실천)작용이라고 주장(정치·행정 2원론).
- ㉒ 1960년대 말 신행정론. 1968년 D. Waldo는 미노부록 회의를 개최하고, 적실성·참여·변화·가치·사회적형평성 등에 기초한 행정학의 독자성 강조하고 신행정론(가치주의 행정학)을 주창.
- ㉓ 1970년대 공공선택론. 1973년 오스트롬(E. Ostrom)은 공공선택론 관점에서 「미국 행정학의 지적 위기」라는 저서를 출간.
- ㉔ 1990년대 신국정관리론(뉴거버넌스). 정부-시장-시민사회 간 네트워크거버넌스, 정부의 조정자 역할 강조

답 ②

11 예산집행의 신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속비                                      ② 수입대체경비                                      ③ 예산의 재배정                                      ④ 예산의 이체

해설

③ (×) 예산의 재배정은 재정통제수단.

■ 예산집행의 신속성 확보 수단과 재정통제 수단

신속성 확보 수단	이용, 전용, 이체, 이월(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예비비 지출, 수입대체경비, 수입금 마련 지출, 총액계상사업, 총괄(총액)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 긴급재정경제 명령·처분, 긴급배정 등
재정통제 수단	배정, 재배정, 지출원인행위 통제, 계약에 대한 통제, 정원과 보수의 통제, 장부의 기록·보고,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예산사업의 사전검토·협의·조사(예비타당성 조사, 총사업비 관리, 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단계별 편성), 명세예산, 예산안편성지침, 보조금의 관리, 재정집행의 관리(매월 경과 후 20일 이내에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대한 감독

답 ②

▶ 관련기출 예산집행의 신속성 확보방안은 모두 몇 개인가?

2011 국회9급

㉠ 예산의 재배정    ㉡ 총액계상예산    ㉢ 예산의 전용    ㉣ 계속비    ㉤ 총사업비 관리    ㉥ 예비타당성 조사 ①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답 ③

▶ 관련기출 예산집행의 신속성 유지방안이 아닌 것은?

2004 국회8급 / 2018 해경간부

① 계속비                                      ② 예산의 재배정                                      ③ 총괄배정예산                                      ④ 예산의 이용·전용                                      ⑤ 예비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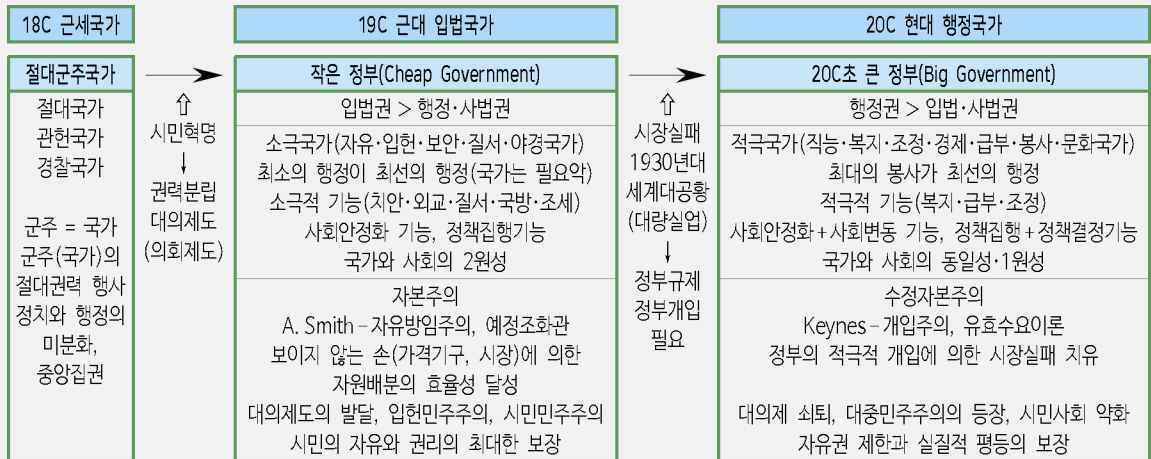
답 ②

12 정부관의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세기 근대 자유주의 국가는 '야경국가'를 지향하였다.  
 ② 대공황 이후 케인즈주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은 큰 정부관을 강조하였다.  
 ③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였다.  
 ④ 하이에크(Hayek)는 『노예의 길』에서 시장실패를 비판하고 큰 정부를 강조하였다.

해설

① (○) 18C 절대군주국가의 경찰국가에서 19C 근대입법국가의 야경국가(치안)로 전환



② (○) 1929년 경제대공황(대량실업)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었고, 케인즈(J. Keynes)는 확대재정정책을 통한 경기회복을 주장하는 유효수요이론 제시했으며, 루스벨트 대통령은 불황 타개를 위한 뉴딜정책 및 복지정책을 시행하였다.

③ (○) 1970년대 말 이후 영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선진국의 정부개혁으로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 ㉠ 영국 - 대처리즘(신보수주의), ㉡ 미국 - 레이건의 공급경제학(레이거노믹스)·신연방주의, 클린턴의 정부재창조(Reinventing Government), ㉢ 일본 - 나카소네 총리의 대부처주의, 지방화시대선언(신지방분권), ㉣ 프랑스 - 조스팽의 신사회주의, ㉤ 독일 - 슈뢰더 총리의 신중도주의

④ (×) 케인즈는 자유방임은 곤란하다면 시장실패를 막으려면 정부 개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지만, 하이에크는 정부 개입의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자유방임 원칙에 따라 시장에 맡길 것을 강조하였다.

• 하이에크(F. Hayek)의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동일시하고 자유주의·보수주의 입장에서 모든 계획경제에 반대. 국가계획제도를 도입하면 의회 제도를 파괴·무력화시켜 독재를 초래하고, 시민의 정치적·경제적 자유와 권리의 침해, 이질성·복합성·유통성이 없는 극히 단조로운 경제사회의 탄생 등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보면서 국가기획과 자유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 신자유주의로 연결되며 큰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

답 ④

13 공무원 신분의 변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권면직은 법률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② 정직은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정직 기간 중에는 보수의 1/2을 감하도록 되어 있다.
- ③ 임용권자는 사정에 따라서는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한다.
- ④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받은 공무원이 직위해제 기간에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 직권면직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해설

이하 법률 조항은 국가공무원법.

- ① (○)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讞責)으로 구분한다.
- ② (×) 제80조(징계의 효력)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 ③ (○) 휴직에는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이 있다(제71조)

• 휴직의 종류

직권휴직	청원휴직
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b>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함.</b>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천재지변이나 전사·사변 그 밖의 사유로 <b>생사나 소재가 불명확하게</b> 된 때 ㉣ 그 밖에 <b>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b>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b>공무원노조 전임자</b> 로 종사하게 된 때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b>휴직을 명할 수 있음.</b> 단, ㉠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해야 함. ㉠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b>임시로 채용</b> 될 때 ㉡ 중앙인사관장(관장)이 지칭하는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서 <b>연수</b> 하게 된 때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b>양육</b> 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b>임신·출산</b> 하게 된 때(자녀 1명에 대해 3년 이내) ㉣ 조부모·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배우자·자녀·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단,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한 휴직은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에 정한 요건 충족 필요 ㉤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할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 ④ (○) 제70조 제1항 제5호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 직위해제 and 3개월 범위에서 대기명령(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 부여) → 대기 명령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직권면직 가능

☒ 직권면직사유

-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감원)
- ㉡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로서 직위해제되어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징계위원회의 동의 필요)**
- ㉣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 ㉤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 ㉥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결정을 받은 때

☒ 직위해제 사유

-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직위해제와 함께 3개월 범위에서 대기명령 가능)**
- ㉡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견책·감봉 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자는 사유가 아님)
-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 ㉤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해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의 종류				
경징계	견책 (謹責)	• 전과(前過)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 공식적 징계절차에 의하고 인사기록에 남음. • 가장 가벼운 징계이며 사용빈도가 높음.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날부터 6개월 간 승진·승급 제한.		
	감봉 (減俸)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1/3을 감함(2/3 지급). •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간 승진·승급 제한.		
중징계	정직 (停職)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그 기간 중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함. •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 간 승진·승급 제한	교정 징계	
	강등 (降等)	•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1~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함.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임용. • 징계처분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간 승진·승급 제한. • 계급을 구분하지 않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는 강등 적용 안 함.		
	해임 (解任)	• 공무원을 강제 퇴직시키는 처분. 3년간 공직 취임 제한,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에 영향 없음. • 단,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공무원의 경우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는 1/4을, 5년 미만인 자는 1/8을 감액 지급하고, 퇴직수당은 1/4을 감액 지급.	배제 징계 (공무원 신분 상실)	
	파면 (罷免)	• 공무원을 강제 퇴직시키는 처분. 5년간 공직 취임 제한, 퇴직급여는 감액 지급. •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는 1/2을, 5년 미만인 자는 1/4을 감액 지급하고, 퇴직수당은 1/2을 감액 지급.		
■ 감봉·정직·강등 구별				
구분	보수 및 직무 종사		승진임용·승급 제한	기타
감봉	1~3개월	보수 1/3 감함 직무에 종사 가능	징계처분 집행 종료일부 12개월 간	·
정직	1~3개월	보수 전액 감함 직무에 종사 못함	징계처분 집행 종료일부 18개월 간	·
강등	3개월			1계급 아래로 직급 내림

14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에서 일선관료들이 처하는 업무환경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원의 부족
- ② 일선관료 권위에 대한 도전
- ③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 ④ 단순하고 정형화된 정책대상집단

**해설**

④ (X) 일선행정관료가 처한 업무 상황은 일률적으로 정형화하기에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다고 보았다.

• 립스키(M. Lipsky)는 일선관료의 문제성 있는 업무환경을 세 가지로 제시.

1. 자원 부족: 인적·물적 자원, 시간적·기술적 자원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 수행.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공급능력을 항상 앞서서 증가. 자원 부족은 즉흥적인 집행과 피상적인 집행을 야기함.
2. 권위에 대한 위협·도전: 일선집행현장에서 육체적·정신적 위협이 큰 환경에 처한 경우 자신의 권위를 보장받으려 함.
3. 모호하고 대립되는 (역할)기대, 이상과 현실적 요구 간 괴리: 일선관료는 집행과정에서 시민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는 '이상'과 개별사례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현실' 간 괴리 때문에 모호하고 대립된 기대에 직면하므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가 많음.
  - ㉠ 목표의 모호성·이율배반성: 목표가 지나치게 이상적이거나,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숨기기 위해 목표를 모호하게 할 경우 일선관료의 업무수행을 목표와 연계하여 평가할 기준을 정하기 곤란하므로, 목표를 측정할 조작적 정의가 어려움.
  - ㉡ 업무성과의 객관적 평가기준 결여: 업무 간 분할과 경계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객관적 성과측정 곤란
  - ㉢ 효과적인 통제의 부재: 일선관료가 대하는 고객집단은 대개 그 기관이나 관료의 성과를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고, 능력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공공서비스를 찾는 사람은 주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가난하고 힘없는 고객들이므로, 행정서비스에 대해 강력한 불평·불만은 곤란함.

답 ④

[관련기출] M. Lipsky의 일선관료제론에서 일선관료들이 처하게 되는 문제성 있는 업무환경이 아닌 것은? 2016 사회복지9급

① 불충분한 자원      ②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      ③ 집행업무의 단순성과 정형화      ④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답 ③

15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자의 합리성뿐 아니라 직관·판단·통찰 등과 같은 초합리성을 아울러 고려한다.
- ② '쓰레기통 모형'은 대학조직과 같이 조직구성원 사이의 응집력이 아주 약한 상태, 즉 조직화된 무정부상태(organized anarchy)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 ③ '점증모형'은 실제 정책의 결정이 점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정책을 점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 ④ '회사모형'은 조직의 불확실한 환경을 회피하고 조직 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전략과 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해설

- ③ (○) Lindblom과 같은 점증주의자들은 '합리모형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성이 없고 점증모형은 바람직하진 않지만 현실성이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점증주의자들이 합리모형을 비판한 것은 합리모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고 대폭적인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Lindblom과 같은 점증주의자들은 점증모형이 '현실에 존재하는 실증적 모형일 뿐만 아니라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모형'이라고 주장한다.

구분	합리모형	점증모형
일반적 시각	이상적·규범적이지만 현실성이 없음	이상적·규범적이지는 않지만 현실적·실증적임
점증주의자(Lindblom)의 시각	이상적·규범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음	이상적·규범적이며 현실적·실증적임

- ④ (×) 합리모형에 의하면 조직은 대안 결과에 대한 예측과 기대치의 계산 등에 의하여 불확실성을 극복하고자 한다. 반면 회사모형에 따르면 실제조직은 장기적인 전략보다는 급박한 문제부터 해결하려 하면서 단기적인 환류(feedback)정보에 따라 단기적인 대응책을 수립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회피하며, 환경에 제약을 가하거나 환경과 타협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통제(예) 거래관행 수립, 계약 체결, 카르텔형성)하는 등 예측 가능한 결정절차를 선호한다고 본다.

답 ④

[관련기출] 정책결정모형 중에서 회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 국가9급

- ① 회사조직이 서로 다른 목표를 지닌 구성원들의 연합체(coalition)라고 가정한다.
- ② 연합모형 또는 조직모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 ③ 조직이 환경에 대해 장기적으로 대응하고 환경 변화에 수동적으로 적응한다고 한다.
- ④ 문제를 여러 하위문제로 분해하고 이들을 하위조직에게 분담시킨다고 가정한다.

답 ③

[관련기출] 사이어트와 마치(R. Cyert & J. March)의 회사모형에 대한 틀린 설명은?

2014 서울9급

- ① 조직의 전체적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수립·집행한다.
- ② 조직 내 갈등의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며 타협적 준해결에 불과하다.
- ③ 정책결정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관심이 가는 문제 중심으로 대안을 탐색한다.
- ④ 조직은 반복적인 의사결정의 경험을 통하여 결정의 수준이 개선되고 목표달성도가 높아진다.
- ⑤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on Procedure)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답 ①

16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정당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 할 수 있다.
- ②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평무사하게 봉사해야 하는 신분이다.
- ③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강화하여 공직의 계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
- ④ 공명선거를 통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제고할 수 있다.

해설

- ③ (×) 정치적 중립은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행정의 안정성·계속성, 능률성·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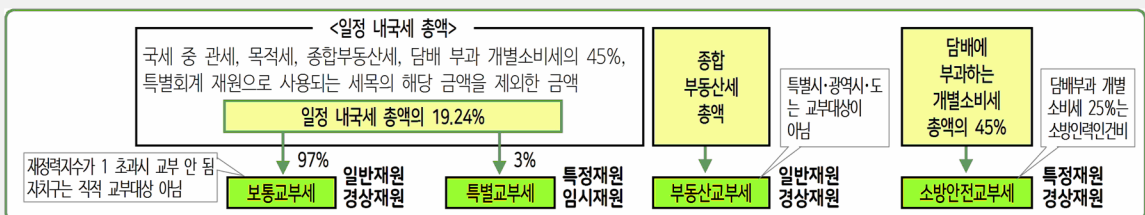
답 ③

17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재정 균등화 기능을 수행한다.
- ②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 ③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각 중앙관서의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 ④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며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해설

- ① (○) 지방교부세 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수직적 재정불균형과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된다(특히 보통교부세)  
 ②④ (○) • 지방교부세 종류와 재원



- ③ (×) 국고보조금의 특징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없이도 법령상 교부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교부한다(단, 특별교부세는 신청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직권으로 교부 가능)

답 ③

18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 ② 국무총리 소속하에 심의·의결기구로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① (X) 공공기관은 특정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 제2조(정의)

4. "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장이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 중앙행정기관장 소속 자체평가위원회(2/3 이상 민간위원)	
		특정평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 기관을 대상으로 특정정책을 평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 등 주요현안시책 등을 평가(심층분석평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유사무(자치사무) 전반을 스스로 평가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자체평가위원회(2/3 이상 민간위원)	
		국가위임 사무 등에 대한 평가	합동평가 (원칙)	중앙행정기관장과 행안부장관이 합동으로 평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합동평가위원회(2/3 이상 민간위원)
			개별평가 (예외)	업무특성·평가시기상 합동평가 곤란시 중앙행정기관장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해 실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개별법에 의한 평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한 경영성과 평가. 외부기관이 실시(자체평가 없음)	

- ② (O) 제9조(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①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 ③ (O)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반의 구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O) 제2조(정의) 3. "자체평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답 ①

【관련기출】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서울9급

- 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 ②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회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설치근거를 둔다.
- ③ 정부업무평가 중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 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답 ①

【관련기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 지방9급(하)

- ① 정부업무평가의 평가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자체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 ③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 ④ 특정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다.

답 ③

19 중앙정부 결산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옳은 것은?

- ① 손익계산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 ② 대차대조표, 재정운영보고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③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 ④ 재정상태보고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보고서

해설

• 국가회계법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결산(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국가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포함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말한다)
3. 재무제표
  -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4. 성과보고서

■ 중앙정부(국가)의 재무제표

민간기업		중앙정부(국가)의 재무제표 구성	
대차대조표	재정상태표	재정상태표 작성 기준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표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	저량
손익계산서	재정운영표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수익, 비용, 운영차액[순수익])를 표시.	유량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순자산변동표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명세를 표시.	유량

답 ③

[관련기출]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기초한 재무회계방식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무제표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2015 서울7급

- ① 재정상태표 ② 재정운영표 ③ 현금흐름표 ④ 순자산변동표

답 ③

[관련기출] 정부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 행정사

- ① 복식부기는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장부의 차변과 대변에 각각 계상하고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의 일치여부로 자기 검증 기능을 갖는다.  
 ② 미지급비용은 현금주의에서는 인식되지 않으나 발생주의에서는 부채로 인식된다.  
 ③ 현행 정부회계는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을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④ 국가회계법상 중앙정부의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로 구성된다.  
 ⑤ 발생주의·복식부기의 정부회계는 성과중심의 정부개혁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답 ④

20 「전자정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음의 개념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계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

- ① 전자문서                      ② 정보기술아키텍처                      ③ 정보시스템                      ④ 정보자원

해설

-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7.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 10.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11. "정보자원"이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가공·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 12.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계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 1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답 ②

[관련기출] 다음 글의 (○)에 해당하는 것은?

2019 국회6급

(○)은(는) 정부업무, 업무수행에 필요한 데이터, 업무를 지원하는 응용서비스 요소, 데이터와 응용시스템의 실행에 필요한 정보 기술, 보안 등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연계한 체계로서 정보자원관리의 핵심수단이다. (○)은(는) 정부의 정보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 강화, 정보자원 중복투자 방지, 정보화 예산의 투자효율성 제고 등에 기여한다.

- ① 블록체인 네트워크    ② 정보기술아키텍처    ③ 제3의 플랫폼    ④ 스마트워크센터    ⑤ 클라우드-클라이언트 아키텍처

답 ②

[관련기출] 전자정부법상 (㉠)과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2021 행정사

- (㉠)(이)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가공·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 (㉡)(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 ① ㉠: 정보자원, ㉡: 정보통신망                      ② ㉠: 정보자원, ㉡: 정보기술아키텍처  
 ③ ㉠: 정보시스템관리, ㉡: 정보통신망                      ④ ㉠: 정보시스템관리, ㉡: 정보기술아키텍처  
 ⑤ ㉠: 정보기술아키텍처, ㉡: 정보통신망

답 ①